



UN대륙붕한계 위원 朴龍安 박사 <서울대 자연대 해양학과 교수>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과총 회의실
일자 : 5월 6일 오후 4시30분

대륙붕 관할권 분쟁 해결에 기대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앞으로 대륙붕 200마일 바깥 한계에 대한 연안국 주장을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위원으로 당선된 서울대 해양학과 朴龍安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대륙붕은 국토면적의 2.8~3.5배로 앞으로 인접국과의 관할권분쟁이 일어날 경우 박위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월 안에 UN해양법재판소(ITLOS)와 마찬가지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를 두기로 결정했지요.

114개국서 위원 21명 뽑아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는 지금 연안 바다를 국토화하기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라 세계 바다의 36%, 주요 어장과 해저 석유자원의 90%가 연안국 경제수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가 바다를 둘러싸고 연안 국가간 분쟁이 도처에서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동북아 「해양중심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하는 해양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과 해양개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어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지난 3월 UN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에 서울대 자연대 해양학과 교수로 있는 朴龍安박사(60)가 뽑혔다. 박박사에게 UN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그리고 해양개발에 관한 최신 동향을 알아보았다.

■ 좀 늦었지만 먼저 첫 UN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UN대륙붕한계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이 후속 조치로 해양법이 발효되는 94년 10월 이후 18

이에 따라 UN은 연안국 1백4개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1명으로 이루어지는 CLCS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CLCS 위원이 되려면 회원국의 3분의 2인 최소한 72표를 얻어야 당선이 됩니다. 위원은 ① 아시아·중동 ② 서유럽 ③ 동유럽 ④ 아프리카 ⑤ 아메리카 등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각 블록마다 3명씩을 선출하고 나머지 6명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중동지역에서는 8개국이 후보등록해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지난 3월13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76표를 받아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본(90표)에 이어 많

은 표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73표로 겨우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에 따라 2차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위원을 배출했지요. 이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면이 있지만 UN대사를 비롯해서 외무부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크게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LCS는 앞으로 대륙붕 200마일 바깥 한계에 대한 연안국 주장을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연안국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CLCS의 보다 확실한 역할은 오는 6월16일부터 20일까지 갖게 될 협의당사국 모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CLCS의 조직은 어떠한지요.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에 행정서기 1명이 있고 산하에 부속위원회를 두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에 행정서기 1명을 각각 두게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기구와 조직은 차후에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지난해 8월1일 초대 UN해양재판관으로 선출된 朴椿浩박사(전 고대 교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요.

박춘호박사는 UN해양재판소(ITLOS)의 재판관으로 바다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즉 ITLOS 재판관은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대륙붕 및 군도(群島)의 소유권, 해양오염, 심해저 자원 등 해양과 관련된 국가간의 모든 분쟁을 다루게 됩니다. CLCS 위원은 200마

일 바깥 한계에 대한 문제를 주로 과학적인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연안국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대륙붕과 EEZ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륙붕은 국토면적의 2.8~3.5배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이용개발의 축은 대륙붕으로 이 대륙붕은 각종 수산물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각종 광물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참치와 같은 심해 어류도 대륙붕을 거쳐 깊은 바다로 나가지요.

우리나라도 EEZ법안 예고

21세기는 대륙붕을 소유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인접국간에 관할권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 EEZ의 선포로 각국은 바다를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려 있습니다. EEZ는 대륙붕 소유와 연계해서 연안국들간에 갈등을 한층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간에 일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釣魚島)문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 우리나라는 EEZ선포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과 갈등을 빚을 일은 없는지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1일 EEZ법안을 입법 예고했지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EEZ 내에서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자원의 탐사와 개발·보존·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EEZ 선포지역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하게 되어 실질적인 영해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한·중, 한·일 간 EEZ선포에 따른 관할권 해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아닙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특히 남해안 제3광구 해역은 경제성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일·중간에 이해가 엇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는 96년 1월에 오는 2005년까지 민간자본 9조원 등 25조원을 투입하는 「해양개발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을 한다면...

해양개발기본계획은 그 역사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무렵부터 李祥羲의원을 비롯해서 12명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해양개발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양개발기본법을 성안해서 1992년 의원입법으로 마지막 국회때 통과시켰습니다. 나는 당시 12명의 위원중 한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 박용안(좌측)교수가 이광영본지편집위원에게 UN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성안은 바로 해양개발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이전까지 12개 부처가 관할하던 해양개발관련업무가 일원화되었지요.

해양개발기본계획은 ① 국가해안 관리체제 확립 ② 해양생물자원 개발 ③ 해양공간 개발 ④ 해양광물·에너지 개발 ⑤ 해양오염관리 및 생태계보호 ⑥ 연안역 통합관리 ⑦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⑧ 해양안전 체제 확립 등 8개 부문에 걸쳐 꿈이 원대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거제도, 선감도, 흑산도에 해양목장을 건설하고 해저 1만m까지 탐사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을 개발하며 파력발전소와 해양온도차발전시스템 등을 실용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북아 해양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산과 광양만을 중추항만으로 컨테이너 양항(兩港)체제를 구축하며 연근해 골재개발을 통해 2000년대 골재자원 수요의 35%를 충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02년까지 하와이 동남방 2,000km의 심해저광구 15만km²에 대한 정밀탐사를 벌여 경제성이 높은 7.5km²를 우선 선정해서 망간단괴 등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지요. 높은 수준의 연구를 토대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양개발에는 해양환경보존에 대한 고려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몇년 전부터 서·남해 일대의 연안 어업이 안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충남대 해양학과 이태영교수팀이 조사한 충남해역에 대한 생태계조사에서 어종과 패류(貝類)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갯벌을 비롯해서 생물이 살아갈 터전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서해안 공업단지 조성이나 간척지 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간척지 개발은 신중해야 합니다. 갯벌이 생성되려면 적어도 수천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오염을 제거하는 천연의 처리장입니다.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커 조류(潮流)에 따른 영향이 어느 해안보다 큽니다. 간척지 개발이나 공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이같은 조류의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 연구해서 적지를 골라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하다해서 결정하다 보면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해양개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의 바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서 7권에 논문 1백여편

세계 모든 나라가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신해양시대를 맞아 바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 말합니다.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연의 혜택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해양시대를 우리의 것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됩니다.

5월31일은 제2회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은 지난해 8월8일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함께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5월

마지막 날을 택해 제정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학회 등 모든 관련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대국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과과정 속에 바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관련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12개 대학에 해양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수준을 보다 높여야 합니다. 대학원 교육을 강화해서 바다에 대한 기초와 응용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안교수는 1961년 서울대 문리과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층서학연구로 이학석사학위(64년)를 받은 후 도미, 브라운대학에서 퇴적학연구로 이학석사, 독일 쾰데학에서 조간대(潮干帶) 바다의 퇴적작용연구로 이학박사(73년) 학위를 받았다.

박박사는 63년 서울대 문리대 조교로 출발, 68년 서울대에 우리 나라 최초의 해양학과를 출범케 하는 산파역을 담당했다. 한국해양학회장(83~85년), 한국지구과학협회 회장(85년),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 총회 정부대표(85년), 서울대 자연대학 부설 해양연구소 소장(89~91년), 서울대 자연과학대 해양학과장(90~92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중 기초과학교류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해양자원 개론 등 7권과 국·내외 논문 1백2편이 있다. 57